

기술의 소유권을 명확히 하자

金 鎮 衡

(한국과학기술원 전산학과 및 인공지능연구센터 교수)



요즘 산학협동으로 기술개발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기술투자가 활발하고 연구 여건이 좋은 선진 외국의 대학에 비하면 미미하지만 대학의 우수인력들이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활발히 개발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연구결과는 수탁회사 소유

산학협동을 통해서 기업은 필요로 하는 기술과 훈련된 인력을 대학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는 반면 대학은 연구비를 확보한다는 점과 과제수행 중에 실용적인 연구 테마와 신선한 아이디어를 찾아낼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필자는 적극적으로 수탁연구를 수행하는 편이다.

그러나 연구과제를 기업으로부터 수탁 받을 때마다 마음속에 남아 있는 의문점이 있는데 그것은 대학 연구실에서 기업과 계약하여 연구하고 그 결과를 넘겨줄 때 어디까지가 수탁한 회사의 소유이고 연구실의 소유는 어디서 부터인가 하는 것이다. 단순논리로 수탁 받아서 연구했기 때문에 그 연구 결과는 모두 수탁한 회사의 소유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따지고 들어가면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다.

문제 제기를 위하여 모대학원 이교수의 가상적인 경우를 들어보자. 이교수는 A회사로부터 어떤 기술 개발을 의뢰받고 대학원 학생들과 열심히 노력하여 수탁기간이 종료될 때 약속했던 기술을 A회사에 성공적으로 공급하였다. A회사는 연구성과에 대체로 만족하였으나 그 기술만으로 상품화

하기에는 부족하고 시장 전망이 불투명하여 더 이상 투자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이럴 즈음 연구에 참여했던 한 대학원생이 연구결과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였다면 이 기술의 소유는 누구인가?

그 새로운 아이디어는 수탁연구의 결과이고 그 수탁연구로 개발된 환경과 수탁연구 수행중에 얻어진 경험이 새 아이디어 개발의 원동력이었다면 그 아이디어는 전부가 아니라면 일 부분이라도 A회사의 소유가 아니겠는가?

우리나라선 소유권 너무 무관심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하는 것은 A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B회사에서 새로운 아이디어에 관심을 갖고 이교수에게 수탁연구를 하자고 제의하면 이 교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수탁연구에 응하면 어쩔 수 없이 A회사와의 수탁연구에서 개발된 기술과 환경이 B회사로 넘어갈 수 밖에 없는데 이것이 도덕적으로 옳은 일인가?

그렇다면 A회사가 관심을 보이거나 동의하지 않으면 그 후속연구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인가? 기술의 소유권은 따지면 매우 복잡한 문제가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무형재산의 소유권에 대하여 관심이 희박하다. 특히 연구개발 결과의 소유에 관하여 수탁한 회사나 국가도, 연구를 수행한 기관과 연구원도 별로 관심이 없다. 자기의 권리를 찾지 않고 있는 반면 남의 권리를 인정하지도 않는 풍토이다. 정확히 소유의 개념이 없으니까 교수 및

연구원의 모럴도 문제이다. 똑같은 결과를 이곳저곳에 팔아 연구비를 확보하기도 한다.

합작 수탁이 해결책

그러나 교수들의 변명을 들으면 일면 수궁이 가는 점도 있다. 연구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곳의 연구비를 모아야만 어느 정도 규모있는 연구를 할 수가 있으므로 할 수 없이 동일, 또는 유사한 연구 계획서를 여기 저기에 제출하고 요청금액의 20~30% 밖에 지원되지 않는 연구과제를 서너개 모아서 연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수의 분야 전문성 때문에 어차피 유사한 과제밖에는 수행할 수 없는 것 아닌가 하고 반문한다. 또 그 분야 전문가가 아니면 유사한지 동일한지 판단을 못하고 또 어차피 정부지원분은 누구도 챙기지 않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교수, 연구원들에게 팽배하다.

필자는 여러 곳으로부터의 지원을 공식적으로 당당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하고 생각하던 차에 현재 인공지능연구센터에서 수행하는 과제는 시작부터 여러 회사를 불러들였다. 즉 어떤 기술을 개발하는데 얼마의 자금과 시간이 소요되는데 그 부담을 나누고 또 그 결과를 공유하자고 참여회사를 공모했다. 오랜 우여곡절 끝에 6개 회사의 지원으로 3년짜리 콘소시엄 과제를 만들어서 여러 대학의 이 분야 전공자들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즉 연구비의 지원은 참여기업들이 공동으로 하고 연구수행은 관련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형태는 국가의 지원을 받는 기관에서 어느 특정 기업이 아니고 다수의 기업을 위하여 개발능력을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또 연구비의 안정적 확보라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다. 이러한 연구형태를 대학은 물론 국책연구소의 연구사업에서도 적극 추진하기를 권장한다.

기술공유 협조는 정확한 값매김부터

동일한 연구결과를 여러 곳에 파는 연구책임자도 문제지만 남의 돈으로 애써 연구된 것을 공짜로 얻고자 하는 회사들도 문제이다. 어떤 기술이 쓸만하게 되려면 많은 노력과 연구비 투자가 필요하니까 상응하는 보상을 하여야 한다는

생각을 기업에서 해야 한다.

요즈음은 시스템이 대형화하고, 복잡해지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시스템이라고 해도 필요로 하는 모든 기술을 한 회사에서 모두 소유할 수가 없다.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경쟁 회사들 간에도 기술을 공유하기 위하여 협조하고 있다. 그 예를 IBM과 APPLE의 협력에서도 볼 수 있다. 남의 기술을 사오고 나의 기술을 팔기 위해서는 기술의 값을 정확하게 결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적정한 대가를 지불할 때만이 장기적으로 협력관계가 유지 될 수 있다.

국가 주도로 몇 개 회사가 모여서 신 제품을 공동개발하는 연구형태를 국가 지원 연구비를 주도할 수 있는 국책연구소에서 선호하고 있다. 약간의 개발비와 보유하고 있는 관련 기술을 내놓고 공동으로 기술개발하여 공유하는 조건으로 회사들의 참여를 유도한다. 국책연구소들은 연구비를 쉽게 확보할 수 있어서 좋고 참여회사들은 국가 지원금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싫지는 않은 눈치다.

프로연구자는 직업모랄 지켜야

그러나 이러한 연구 추진 형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다. 사회주의가 갖고 있던 그 문제점, 즉 공동을 위하여 개인 것을 모두 내놓아라 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경쟁사와 같이 개발하는데 어떻게 모든 기술을 털어놓고 공유할 수가 있겠는가? 부자와 거지가 모든 재산 다 털어놓고 나누어 갖자고 하면 거지들은 많이 모여들 것이고 부자들은 재산을 숨길 것이고. 진정한 의미의 협동은 상대방이 갖고 있는 기술의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참여회사가 갖고 있는 기술이라 하더라도 이를 구매하여 사업단에서 공유하여야 한다. 제 값을 지불하고자 할 때 능력 있는 기업, 대학, 연구소의 기술을 사업단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도 이제는 기술의 소유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연구비를 받고 연구를 업으로 해 주는 프로 연구자로서 직업 모랄을 지켜서 수탁 받아 개발한 기술이 누구의 소유인지를 양심으로 밝혀 주어야 한다. 그럴 때에만 우리에게 계속적인 수탁과 연구비 지원이 있을 것이고 우리의 기술도 제값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